【 2016.07.20(수) 강원일보 】

대형 SOC사업 지역업체 철저히 소외

원주~강릉 복선·동홍천~양양 고속도·올림픽 시설공사
대표사 참여한 도내 건설사 한곳도 없어 남의 잔치로 전락
2조원대 동서고속철 공사도 들러리 우려… 대책 마련 시급

도내 대형 SOC사업에 강원도 업체가 없다. 각종 개발호재로 건설 특수를 기대했지만 발주처의 낮은 공동도급비율과 까다로운 규정 적용으로 남의 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주~강릉 복선전철,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공사,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등 SOC사업에 대표사로 참여한 도내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각 사업의 공구별 예산 규모가 1,000억원을 넘으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업체가 대표사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또 발주처들이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까지 낮게 적용하면서 도내 업체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3조7,000억여원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총 13개 공구로 나눠 발주됐다. 이 중 대표사 13개사는 모두 외지 대형업체들이 낙찰받았다. 전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중 공동컨소시엄 내 도내 업체는 절반도 안 되는 15~17개사가 참여하는 데 그쳤다. 도내에서 추진되는 SOC사업에서 지역업체들이 외면받은 것이다.

특히 국가계약법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은 최대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원주~강릉 복선전철에서 지역업체 지분은 15~20%였다. 이에 따라 3조원이 넘는 공사에 지역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5,550억~7,400억원에 불과했다. 공사에 참여한 A업체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분할·분리 발주와 공동도급비율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도내 업체들은 들러리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발주될 2조여원의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현재로선 쉽지 않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1,000억원 이상으로 발주될 각 공구별 사업에 필요한 배치기술자 보유 기준 등이 중소기업에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 발주된 춘천시청사 건립공사와 속초교도소 건립공사에는 각각 31곳과 33곳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지역 건설업계는 앞으로 분할발주와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확대를 요구해 도내 업체 참여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분할발주를 통해 공사금액을 낮추고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을 30% 이상 늘려야 한다"면서 "대형 SOC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발주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2016.07.20(수) 건설경제 】

건설협회, 16개 시도회 사무처장회의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회의 사무처장들과 만나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분리발주 조례 대응,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창환 건설협회 전무는 "건설협회 본회와 전국 시도회는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건설업계 현안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